

베트남 5개 세제 개정안 발표

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

주요내용

- ▶ 베트남 재정부는 8월 15일, 2019년 시행을 목표로 5개 세제 개정안을 발표함.
- ▶ 베트남의 공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은 세수 확대 및 조세행정 효율화 등을 목표로 세제를 개정함.
- ▶ 조세 개정안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.

1. 이슈 현황

▶ 베트남 재정부는 8월 15일, 2019년 시행을 목표로 5개 세제 개정안을 발표함.

- 팜 딘 티 세제정책부장은 8월 15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가가치세, 특별소비세, 법인소득세, 개인소득세, 천연자원세의 개정안과 2019년 시행 목표를 알림.

표 1. 세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

개정 세제	주요 내용
부가가치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행 세율 10% → 12% 혹은 12% 적용 후 2021년부터 14% • 농산물, 의약품, 교육, 과학기술 분야 우대세율 5% → 6%, 우대세율 적용품목 축소
특별소비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량음료 특별소비세 신규 적용(10% 혹은 20%) • 담배류에 대해 2020년 이후 종가세(2020년 이후 75%~80%, 2021년부터 85%) 혹은 종량세(2020년 이후 관련 한 갑 당 1,000동, 시가 한 개비 당 1,500동) 적용 • 자동차 특별소비세 조정, 픽업트럭 특별소비세 인상
법인소득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소자본세제 도입(부채비율*이 제조업 5:1, 금융업 12:1, 그 외 4:1 초과시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없음) • 영세기업, 중소기업** 법인소득세 인하(현행 표준 20%에서 각각 15%, 17%).
개인소득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IT, 농업, 농산물가공·제조업 등 개발 투자 우선부문 종사의 개인소득세 50% 감면 •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조정(7→5단계, 중간소득구간 확대) •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율 10%→30%로 점진적 인상, 면세구간(1천만 동) 폐지 • 비고용자에 대한 원천과세 기준 200만 동→500만 동(과세율은 10%로 동결)
천연자원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련 법률과 일치성 확보, 과세대상 및 과세 가격 명확화

주: * 부채비율(debt-to-equity ratio): 자기자본 대비 부채(비율)

** 연수의 30억 동(약 1억 5000만 원)이하 영세기업, 30억 동~500억 동(약 25억 원) 중소기업

자료원: PwC Vietnam, Vietnam Briefing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.

2. 원인과 분석

▶ 베트남의 공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은 세수 확대 및 조세행정 효율화 등을 목표로 세제를 개정함.

□ 베트남은 공공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를 겪으며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이를 완화할 유인이 존재하였음.

- 베트남은 2016~2018년 간 공공부채 법적 상한선을 GDP 대비 65%로 설정했으나 2015년 62.2%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64.8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이는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적 운영, 경상비 지출 증가 등 세출 측 요인과 주 세원 중 하나인 원유의 가격 하락, 법인세 비중 감소 등 세입 측 요인과 함께 비효율적 조세행정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어 조세행정 효율화와 세수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정이 필요했었음.

□ 과세당국의 세제 개정은 조세행정 효율화와 기업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함.

- 세제 개정은 △조세관련 법령, 총리령 등 제도와 ‘2011~2020 조세 개혁 전략’과의 일치 △중소기업 지원, 투자법 등의 방향과 부합 △법체계 통일성 확보를 통한 조세행정 간소화 △베트남이 참여중인 국제 협약과의 일치를 목표로 함.
- 또한 법체계의 일치성·투명성·명료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 원활화와 생산·경영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.

3. 전망과 시사점

▶ 조세 개정안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.

- 언론은 이번 개정안이 경제여건에 합당한 개편으로, 세수 확대와 공공부채 감소, 탈세 관련 손실 감소, 경영환경 개선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를 전망함.
- 그러나 시장 현실 반영이 없는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개정안은 베트남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.
 - 이번 조세 개정안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인 감소, 가치분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등 경제 성장 둔화의 가능성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율¹⁾ 인상으로 저소득층 부담 증가 및 사회 불평등의 우려가 존재함.
 - 세율 인상 없이 세원의 확보, 탈루 관련 범죄 처벌, 조세행정의 효율적 집행 등으로 세수 확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됨.
- 조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베트남 경제에 영향이 예상돼 현지진출 한국 기업 및 진출예정기업의 관심이 요구됨.
 - 개정안은 조정 여지가 큰 조항도 포함하며, 과세당국은 각계의 반응을 고려한 후 법무부,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향후 개정안 수정 및 시행 여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 - 또한 소비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, 특정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특별소비세 등의 개정안에 대해 관련 한국기업의 주의가 요구됨. **EMERiCs**

💡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) 부가가치세는 베트남의 조세수입의 가장 큰 비중(25% 이상)을 차지하는 세원으로 현행 10% 세율은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.